

전환기 동북아의 대외관계

- 한·일·극동러시아를 중심으로 -

金 京 順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3.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안보협력
4.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5. 결 론: 지역협력의 전망

1. 서 론

냉전체제 와해 이후 동북아는 이념적 대립에 의한 닫힌 체제에서 벗어나 열린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가 상호간 제한 없이 정치적·경제적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북아는 지리적인 인접성뿐 아니라 냉전적 유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면에서 협력의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러시아와의 정치·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환경변화와는 달리 이들 국가간 역사적 유산, 상호 부정적 인식, 영토문제에 이르는 대립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협력을 위한 제반조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일·러 3국은 경제적 이익극대화의 목표뿐 아니라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안보적 차원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지닌 경제적 역량에 따른 호혜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리적인 면과 개발 정도에 비추어 이들 국가간 협력대상지역은 러시아 극동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련방해체 이후 전쟁상태에 돌입된 체첸을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며, 서방세계 역시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경제적 약화에 대비하지 못했던 러시아 중앙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극동지역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중심적인 대외정책 패턴을 변화하여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태경제체제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¹⁾ 이를 위해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적 투자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외부국가의 투자와 협력없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극동지역 발전을 추동하기는 쉽지 않다.

극동지역을 둘러싼 국가간 정치·경제적 협력이 극동지역의 자체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발전과 안보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련붕괴 이후 한국의 대러접근과 러시아의 대한접근 의도는 서로 달랐고,²⁾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1) Sharif M. Shuja, "Moscow's Asia Policy," *Contemporary Review*, Vol. 272, No. 1587(April 1998), pp. 169-176.

2) Georgii Toloraia, "Korean Peninsula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Russian

이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했을 때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태도에 불평하게 되었다. 일본도 소련방해체 이후 러시아 극동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극동지역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에서 주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직 이들 국가간 지역 협력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논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및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쌍무적인 정치군사적 협력 및 경제적 협력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간 협력이 추진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황

러시아 전영토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극동지역은 영토의 규모뿐 아니라 석유, 가스, 목재, 다이아몬드, 수산자원, 석탄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면 인구는 약 716만 명으로 전인구의 5%에 불과,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³⁾ 10개의 행정구역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연방해체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푸틴

Journal), Vol. 49, No. 1(Feb/, 2003), pp. 24-35.

3) Goskomstat Possii, *Rossiiskii statisticheskii ezhegodnik ofisial'noe izdanie 2000* (Moskva, 2000), pp. 54-55.

4) 행정지역으로는 사하공화국, 뿌리모리에와 하바로프스크 변경주(크라이)를 비롯해 아무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마가단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관구, 코라크자치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의 강력한 국가건설이라는 기치하에 2002년 5월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ii)를 극동지역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중앙통제의 노력이 실행되고 있으며, 지리적·인구학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움직임보다는 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통한 러시아 내에서의 안정이 모색되고 있다.⁵⁾

(1)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확대 필요성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을 유럽의 일부로 인식해 왔으며, 구소련방의 붕괴 이후에도 유럽으로 통합되어 시장메커니즘을 지닌 민주국가를 형성하겠다는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지향했다. 사실 구소련방 붕괴 초기 러시아는 서구유럽이 국제정치·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의 모든 영역(원자재, 재정, 상품과 서비스, 노동)에서 주요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의존하고 발전을 도모할 세계는 유럽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⁶⁾ 하지만 코지레프(Andrei Kozyrev) 외무장관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친서방의 교정책은 러시아내 민족주의세력의 반대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⁷⁾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러시아의 위상확립에도 기여하지 못했다.⁸⁾

5) Rajan Menon, "The Sick Man of Asia: Russia's Endangered Far East," *The National Interest*, Vol. 73(Fall, 2003), pp. 93-103. 체첸지역과는 달리 극동·시베리아지역의 분리주의적 움직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지역은 경제적·역사적·민족적으로 통합된 주체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6) V. Kremenuik, "The Ideological Legacy in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A Russian Journal)*, No.3, 2001(<http://www.cionet.org/olj/iarj/krv02.html>), p. 5.

7) *Izvestiya*, 1996. 1. 10.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코지레프 외무장관에 대해 "독립과 힘의 원칙, 민족과 국익의 개념을 망각했다"고 비난하였다.

8)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세종연구소 연구논문98-08(세종연구소, 1998). 친서방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서유럽의 군사동맹인 NATO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초기 대외인식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있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환경인식에 따라 변화되었다. ‘유라시아주의자’인 스탄케비치(Sergei Stankevich)는 서방 일변도의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이러한 러시아의 대내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국제질서에서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또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에 한정될 수 없었다. 중국, 일본, 한반도 등 경제·군사적 강국이 포진해 있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지역이 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러시아도 이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연방해체 이후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피폐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문제해결에 있어 유럽에 치중된 발전노선에서 소외된 시베리아·극동지역 발전의 관건이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통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방해체 이후 세계경제로의 진입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유럽과의 공동개발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서시베리아지역과 달리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북아안보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변 동북아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그들 주변국가들의 행동 역시 러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위치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정세인식은 2000년 7월에 발표된 ‘대외정책 신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이 문건에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상에서 아시아

9) *Nezavisimaya Gazeta*, 1992. 8. 19.
 10)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http://www.nanet.go.kr/file4/foinfor62-3.htm).

의 중요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는 러시아에게 안전보장을 위한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장과 갈등의 근원지가 존속하고 있는 긴장지역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는 개발이 지연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 러시아 자체의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해소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간에 상호 긍정적 상관관계를 전제할 때 극동지역의 발전 필요성은 지역안보 증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는 아태지역 통합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 지역국가들과의 쌍무적인 관계확대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러시아 자체적으로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주요한 국가적 지향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구와 아시아의 중개자로서의 연계역할, 안보적 측면에서는 러시아 주변지역에서의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분쟁방지, 중국·인도와의 우호관계 강화,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 균형관계의 발전, 극동지역의 발전과 대외관계의 연계축으로서 러시아의 국내 경제전략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¹¹⁾

11) M. Titarenko, V. Mikheev, "The Asia-Pacific Region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Russian Journal), No. 3 (2001), pp. 2-3.

(2) 정치·안보상황

극동지역은 지역적으로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부터 관할권의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지역의 위상 증대와 더불어 극동지역의 중요성도 증대된 반면,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체제전환기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옐친시대 초기 극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중앙의 권력투쟁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가에 있었으나,¹²⁾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그 원심적 힘이 증대되었고 보다 큰 경제적 자율성을 원하는 분권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동지역의 자치적 권한은 푸틴시대에 들면서 상당히 감소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선 직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통령 전권대표에 의해 통제하고자 했다.

푸틴은 2000년 5월 폴리코프스키를 극동지역의 전권대표로 임명했다. 그의 전권대표로의 임명은 그가 극동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지역에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각 지방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도 못했으며, 지방의 환경이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관료적 정책결정이 초래하는 폐해를 드러내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책결정권은 축소되었다. 연방경찰이나 연방법 시행으로 지방당국이 주민들의 재산과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되었다. 지역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역시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12) Robert Valliant, "The Political Dimension," Tsuneo Akaha(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n Far East: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pp. 3-22.

극동지역은 정치적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보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시대 극동지역은 태평양함대를 위한 근거지로 거대한 군사복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연방해체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도 이념적 대결에 기반한 안보위협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1980년대초 구소련은 이 지역에 50만에 이르는 군과 200개 이상의 폭탄이 장착된 대륙간 중단거리핵미사일 및 수천대의 전투기를 배치해 왔다.¹³⁾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1989년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지상군 43개 사단이 39만명의 군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1998년 사단은 15개로 축소되었고 군인원은 19만명으로 감축되었다. 태평양함대는 1989년 약 100척의 주요 전투함과 140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에는 각각 45척으로 감축되었다. 공군의 경우 구소련기인 1989년 극동에 2,430대의 전투기가 있었으나 1998년에는 900대로 삭감되었다.¹⁴⁾ 그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력 약화, 냉전종결로 인한 태평양함대의 전략적 중요성 감소, 중·러 관계개선에 따른 경제완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태평양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감축은 군사적 의미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더 이상 이념적 대립이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극동지역에서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으로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으로 ① 한반도에서의 잠재적인 핵을 포함한 무력 갈등; ② 중국의 성장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만이나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 ③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비합법적 무기거래; ⑤ 미국의 전략미사일 방

1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London : IISS, 1989), p. 42.

14)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2000), pp. 261-262.

어체계; ⑥ 비합법적 이민과 러시아의 수자원 침해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⑦ 러시아 극동의 아태지역과의 분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직접적 안보위협 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안보문제로는 미국에 대한 견제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점을 막고자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확립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사 역시 한반도에서 정치적 위상 확보 및 실질적 경제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한편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점에 대한 견제인 것이다.

또 다른 안보문제로는 극동지역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이다.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이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러시아로의 중국인 유입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했다. 거대한 영토의 극동지역은 인구 7백만에 불과한 인구희소지역이다. 반면 극동지역과 접한 중국의 동북지역은 1억 3천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에 비해 인구밀도가 30배 이상인 지역이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 국경무역이나 이민 등으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극동지역에 합법,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중국인의 유입에 대해 경고해 왔다.¹⁷⁾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편의적인 협력이라고 보고 있다.

15) Sergey Sevastyanov, "Russia Reform: Implications for Regional Policy and the Military,"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Russia's Far East: A Region at Risk*(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p. 230.

16) Rajan Menon, op. cit., 극동거주 중국인의 수적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과장할 경우 300만이라는 보고서도 있으나 수십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 Viktor L. Latin, "Yellow Peril' Agai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Far East,"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eds.),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Armonk, NY: M.E. Sharpe, 1995), pp. 298-299.

(3) 경제상황

극동지역은 개혁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구소련방 말기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극동지역의 인플레이션은 급증했고, 산업생산은 급락했으며, 대내 자본투자는 사라졌고 실업은 급증했으며,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급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경제체제 전환과 더불어 극동지역의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 연방해체 이전 극동지역은 태평양지역의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산업기반은 군산복합체였고, 이곳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되었다.

고르바초프 개혁 이후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극동지역의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군수품에 대한 국가주문이 급속히 감소되고 자본을 비군사부문으로 이동시키자 군수산업은 작동할 수 없었다. 더욱이 열친기에 들어서 교통·에너지·임금 등에 대한 중앙의 모든 지원이 사라졌다. 지역의 군산복합체들은 군수산업의 민수용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았으나, 산업체의 軍民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전환했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1991년 이후 국가주문의 감소로 러시아 군수품은 1995년까지 90% 이상 축소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동안 극동지역의 모든 부문의 산업생산은 약 57% 축소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해고를 초래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극동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1990년대 10년간 이 지역 인구는 이민으로 9% 이상 감소하였다. 극동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민은 1992~94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이민은 열악한 자연환경뿐 아니라 낮은 소득과 탈연방 이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감소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에서 기인한다. 1994년 극동지역의 일인당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25~35% 낮았으며, 실질소득은 더욱 낮았다.¹⁸⁾ 1990년대 내내 극동지역은 시가 제공하는 열과 전기공급 등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어려움

을 겪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북부지역이 더욱 심각했는데, 극동지역 가운데 남부의 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주, 연해주의 1991~97년의 인구 증감비율은 -4.5%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17.2%에 이르렀다.¹⁸⁾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 가지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동·서간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자본이 풍부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근접해 있어 조건이 성숙되면 지역국가들의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동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기까지 자본유입을 위한 방법으로는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극동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에서 목재, 비철금속, 귀금속 및 수자원에 이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북아지역 에너지수요의 급증에 따라 동시베리아·극동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은 지리적으로 소련의 중앙에서 멀고 떨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자원의 추출비용이 높아 개발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현재 튜멘시를 중심으로 한 서시베리아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동시베리아와 극동은 아직 개발 추진단계에 있다. 최근 이르쿠츠크와 극동의 사할린 가스·석유전의 개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

18) Vladimir Popov, "Reform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ussian Far Ea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3, No. 4(Winter 2001), pp. 33-66. 극동지역의 소득은 비슷한 생산을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 이는 개혁 이전에 주택이나 사회인프라를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재원의 축소에 기인한 소득조정 때문이다.

19) Vladimir Kontorovich, "Can Russia Resettle the Far East?," *Post-Communist Economics*, Vol. 12, No. 3(September 2000), p. 367.

지 자원 외에 사하공화국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구리, 텅스텐, 우라늄 등 수많은 금속광물 및 타이가지대와 혼합삼림지대가 위치한 시베리아·극동의 삼림자원도 풍부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지리적 장점을 언급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유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되어 않아, 최종도착지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지만,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계되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극동지역은 확대된 경제교류를 대비한 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래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변수는 지역의 경제적 동력과 아태지역 경제와의 통합 정도라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연방해체 이후 이 지역은 동북아지역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경제적 동력을 상실해갔다. 실제로 연방해체 이후 개방화와 세계시장에 의한 가격구조는 이 지역의 산업을 보호해 줄 수 없었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아·태경제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산업개발과 발전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유치였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을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아·태지역과의 통합전략이 다르겠지만,²¹⁾ 서방국가들이 동유럽이나 러시아 유럽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극동지역은 동북아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야

20) Nobuo Arai and Tsuyoshi Hasegawa, "The Russian Far East in Russo-Japanese Relations," Tsuneo Akaha(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 Far East: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London: Routledge, 1997), pp. 157-197.

21)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극동은 3개의 하위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 극동지역으로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주, ② 어업에 종사하는 오흐츠크해 주변으로 사할린주와 캄차카주, ③ 다이아몬드, 금, 에너지 추출에 의존하는 북부 극동지역으로 사하공화국과 마가단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상황이다. 아직 본격적 투자가 가동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경제강국들과의 인접성은 극동의 발전을 위한 축이 될 수 있다.

대내적인 경제발전 및 대외적 협력의 축으로서 발전을 필요로 하는 극동 지역에 대해 최근 러시아 지도부의 개발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1996년에는 “1996~2005년에 이르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을 동북아시아와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국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최근 중앙당국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국가주문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의회는 군산복합체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12월 군산복합체의 파산을 보다 어렵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²²⁾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극동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을 약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극동지역 경제발전 결과를 빠르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거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극동지역 경제통합 의지가 확고하다면 점차 동북아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안보협력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러·일 정치·안보관계는 지난날 대립적인 구도에 비해서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 러·일간의 영토문제, 북한핵문제와 같은 긴장요인들과 그를 둘러싼 대립적 속성이 잠재해 있다. 더욱이 동북아국가간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할 공동의 메커니즘을 창출하지 못한 채 변

22) Sergey Sevastyanov, *op. cit.*, pp. 224-229. 법에 따르면 군산복합체의 파산은 군산복합체의 책무가 자산보다 클 때만 진행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에 비해 두배에 이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의 속성은 지니고 있으나 지난날과 같은 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²³⁾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러, 러·일의 정치·안보협력은 속도의 완급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한·일의 러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이라는 틀 아래서 교류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 한·러 관계변화와 한반도 안정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러시아 극동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한·소간 외교관계 수립 초기에 한국은 인접한 러시아 극동과의 협력보다는 북한과의 경쟁차원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중앙인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연방해체 이후 한·러 간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극동은 정치·안보적 의미보다는 역사상 한인거주지역인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문화적 관심대상이었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점차 자원의 보고로서 가치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안보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냉전기 동안 구소련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고르바초프-노태우 대통령의 비공식 만남 이후, 9월 구소련과 한국은 공식 외교관계 수립으로 구소련은 남북한과 동시에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한 등거리라기보다는 한국편향적인 것이었다. 199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옐친 대통령은 분쟁시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1961년에 체결된 조·러조약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한·러 양국 대통령은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① 정치·경제

23)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Chap. 2.

· 과학·문화협력을 위한 기본관계조약, ② 군사교환방문 협정, ③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조인했다.²⁴⁾ 영토문제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측은 동북아에서 한국을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국으로 보았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확보라는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고무되었다. 즉 1992년 옐친의 한국방문은 러시아측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인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을 주로 외교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결국 이러한 입장차이는 양국간의 갈등적 요소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한국이 일본을 대체할 만한 투자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²⁵⁾ 더욱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하락해 1994년 북한핵위기사 주요 협상대상국으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갖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옐친 초기 경제적인 면에 과도히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편향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북한핵위협을 경험한 러시아는 점차 이 지역의 정치·전략적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이 지역에서의 역할확대를 희망하고 있다.²⁶⁾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러시아의 대외정치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요한 불안정 근원지역으로 지역안보적 차원에서 주요 관심대상이다. 극동지역의 인구 대부분이 러시아·북한 경계 수백km 내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로

24) Shim Jae Hoon & Ed. Paisley, "Trade and Trade-off: Yeltsin's Visiting Bring Profit to Seoul, Moscow,"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5, No. 48(Dec. 3, 1992).

25) Georgii Toloraia, *op. cit.*, 2002년 11월 한·러간 기본협정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었으나, 협정 초기 예상과는 달리 경제부문에선 원하던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1990년대초 상당히 발전한 양국간 무역은 한중무역 총액의 1/10도 못되며, 교역의 내용 역시 러시아측에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6) Alexandre Y. Mansourov, "Russia President Putin's Policy towards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Vol. 15, No. 1(Spring/Summer 2001), pp. 42-71.

서는 극동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나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국가들의 개발투자가 필수적인데 한반도의 불안정은 이러한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상황이 자국의 안보에 해악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과 각기 관계정상화와 선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1990년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로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느슨해진 부분을 줄라매는 것', 즉 북한과의 관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²⁷⁾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어낼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러시아연방 초기 한국편향적 외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북한과의 협력관계 재개 필요성을 논하고 남북한간 균형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²⁸⁾ 1996년초, 러시아 외무장관 프리마코프는 남북 양국과 모두 우호적 관계확대를 위한 균형외교정책을 취했다. 대북관계 현안인 1996년 9월 종료된 新조·러 상호우호협력 조약의 체결문제를 1999년 외무부 차관 카라신의 북한방문으로 조약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의사도 밝혔다.²⁹⁾ 2000년 2월 외무장관 이바노프(Igor Ivanov)가 평양을 방문했으며, 8월에는 러시아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2001년 4월 북한의 국방장관 김일철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군사적 협력과 군사기술 원조에 관해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협정을 체결했다. 200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차로 극동지역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일은 기차여행 도중 옴스크에서는 T-80탱크공장을, 모스크바에서는 로켓제조공장, 샹트 페제르부르그에서는

27) 폴로랴야 G. 다비도비치, 김록양 역, 「러시아·북한관계 考察: 러시아와 북한: 極東의 오랜 파트너」, 『극동문제』, 2000년 No. 5(<http://www.nanet.go.kr/qhatsnew/foinfo/file/foinfo68-3.htm>), p. 4.

28) 김경순,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군사』, 제37호(1998), pp. 219-255.

29)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00*, op. cit., pp. 251-252.

터빈제조공장 및 노보시비리스크에서는 핵물리학 연구소와 Su-34 전투기 생산공장을 시찰했다.³⁰⁾ 이러한 접촉과 더불어 극동지역은 2002년 김정일-푸틴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정치·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렇듯 푸틴의 대북한 접근이 시도된 이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북관계는 잦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잠수함의 구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관한 협상과 같은 정치·안보영역에서의 러·북관계는 러시아 극동과 관련을 지닌다.³¹⁾

한국 역시 자체적인 외교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극동지역과 개별적인 정치·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러시아정부의 기본적인 외교방침하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협력의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한·북·러 삼각협력의 주요한 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두만강 경제개발계획이나 전력, 가스 등 러시아 극동의 에너지자원 관련 협력은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요한 협력이 될 것이다.

(2) 러·일 관계와 국방교류 증진

구소련방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안보협력은 침체되어 왔다. 냉전종결 이후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일본에게 주요 안보위협을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對아태지역정책의 표명이 양국간의 관계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현안인 영토문제와 일본의 ‘정경불가분’정책³²⁾

30) 『世界週報』, 2000. 9. 11, pp. 50-51.

31) Young-Chool Ha, “The Dynamics of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op. cit.*, pp. 397-415.

32) 홍성원,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일·러 경제관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슬라브학회

은 양국간 관계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양국관계의 급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양국간 영토문제와 평화조약 체결문제가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³³⁾

러·일 영토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1996년에 이르러 양국은 관계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1996년 후반 일본은 대러정책에서 ‘정경불가분’의 원칙 대신 ‘중층적 어프로치’를 제시하였다. 북방영토(남쿠릴섬)의 반환이 중요하지만 러·일 관계가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것이므로 양국 정상간 회담, 러시아 시장경제이행을 위한 협력,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 문화교류 촉진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의 입장변화에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존재한다. 1996년부터 일본이 러시아에 적극적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단순한 희망이기보다는 러·중 관계개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³⁴⁾ 동북아에서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일본으로서 외교적 운용방안의 다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NATO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수용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되었다.³⁵⁾ 러시아에서도 프리마코프가 새로운 외무장관이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남쿠릴섬의 반환이 아닌 공동개발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관계개선은 1997년 보다 구체화되었다. 6월말 덴버에서의 G7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대러관계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보이게 되었고, 7월 하시모토 수상은 대러외교 3대원칙으로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을

발표논문(2002. 11. 15-16), p. 98. 일본과 소련(이후 러시아)의 외교관계 단계는 ‘정경분리’(1956-1979), ‘정경불가분’(1980-1995), ‘중층적 접근’(1996-현재)의 3단계로 나뉜다.

33) Hiroshi Kimura, “Putin’s Policy Toward Japan: Return of the Two Islands, or More?,” *Demokratizatsiya*, Vol. 9, No. 2(Spring 2001), pp. 276-291.

34) Sergey Sevastyanov, *op. cit.*, pp. 223-246.

35) Glen D. Hook(ed.),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pp. 353-354.

제시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옐친과 하시모토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³⁶⁾ 이후 옐친-오부치간 1998년 ‘러·일간 건설적 동반자관계 형성에 관한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도 2000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양국은 평화조약에 관련해 국경획정과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2개 소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양국간 외교관계 개선은 안보분야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했다. 양국간 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은 주로 군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과 합동군사훈련 및 상호방문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러·일 군사부문에서는 1996년부터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96년 4월 일본 방위청장관 우스이(Hideo Usui)가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그라초프(Grache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듬해인 1997년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로지오노프(Rodionov)가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간 군사적 신뢰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996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쿠라마(Kurama)호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항을 방문하여 러시아 해군 300주년 기념축하행사에 참석했다. 1990년대초 이미 캐나다, 미국, 중국, 한국 등의 해군함정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었지만, 이는 러·일 양국간 군사관계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해군 역시 그에 대한 답례로 1997년 6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비노그라도프(Admiral Vinogradov)호가 도쿄를 방문했다. 1998년 7월에는 일본 구축함 쿠라마와 야마기리(Yamagiri)호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러시아 해군의 날 축제에 참석하였으며, 최초로 일본 북해지역에서 러·일 양국간 공동해상탐색구조훈련이 실시되었다.³⁷⁾

36) Alexei V. Zagorsky, “Three Years on a Path to Nowhere: The Hashimoto Initiative in Russian-Japan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74, No. 1(Spring 2001), pp. 75-93.

또한 1999년 8월 일본방위청 장관 노로타(Hosei Norota)는 러시아 국방 장관을 공식방문하고 군고위급인사 교류, 정기적인 정책실무협의, 함정의 상호방문과 공동훈련 실시에 관한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는 또한 모스크바에 이어 방문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만나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간 핫라인 설치와 양국간 해상탐색구조훈련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1999년 9월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의 함정이 일본 요코스카를 방문하였으며, 2000년 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총참모인 후지타(Kosei Fujita) 제독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 그는 바랴그(Variag) 미사일 순양함에 승선할 수 있었으며, 러·일간 해상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또한 2003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관이 러시아를 공식방문³⁸⁾하는 등 러·일 양국간 국방장관급 고위층의 상호방문과 특히 극동 군사지역으로서 블라디보스톡항에 기반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와의 상호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정치·군사안보 부문에서의 교류는 한편에서는 상호간의 안보위협과 불신감의 축소에서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전략구도상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인식변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에도 러시아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보아왔다. 러시아군은 극동지역에서 핵을 보유한 군사력이며, 러시아의 불안정한 경제상황하에서 러시아 방위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여러 수준의 정치·군사교류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는 상당정도 양측이 지녀왔던 불신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³⁹⁾ 유동적인 아시아의 군사전략적 상황에서 러시아도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해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⁰⁾

37)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 op. cit.*, p. 254.

38) *Nezavisimaya gazheta*, 2003. 1. 15,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방리는 푸틴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협의사항을 양국간 실무장관이 만나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39) Masahiro Akiyama,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RUSI Journal*, Vol. 143, No. 2(April 1998), pp. 5-9.

2000년 푸틴정부의 등장시점에서 이러한 협력조치로 러·일 양국간의 정치·군사관계는 상당히 증진되었다.⁴¹⁾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것임이 명확했다. 2000년 9월 푸틴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에서 양국은 국제분야에서 상호협력하자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가 WTO와 ASEM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지지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북일관계 정상화, 북러관계 강화, 북한장거리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모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투자, 안보, 환경, 군사협력 등 15개 문서가 서명되었다.⁴²⁾ 그러나 양국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평화조약 협상에 대한 입장에서 기인하는데,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협정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단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수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푸틴은 러시아의 여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영토반환이 실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따라서 2001년 3월 러·일 양국정상은 이르쿠츠크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평화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르쿠츠크선언'을 발표하였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시 양국정상은 영토문제, 경제, 국제테러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경제 등 6개 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에 서명하였다.⁴³⁾

40) Victor Pavliatenko and Alexander Shlindov, "Russia-Japanese Relations: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Far Eastern Affairs*, No. 4(2000), pp. 13-18.

41) *Ibid.*, pp. 3-31.

42) Hiroshi Kimura, *op. cit.*, pp. 276-291.

43) Joint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Russia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on the Adoption of the Russia-Japanese of Action, the Kremlin, Moscow, January 10, 2003(<http://www.In.mid.ru> 검색일 2003. 11. 6).

4.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러시아 극동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산업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으나, 시장의 제한성과 제도적 미비로 1990년대 초반 경제협력에서의 실패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협력추진을 꺼려왔다. 최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 한·러 경제협력

러시아 극동에서의 한국은 주로 천연자원과 자금의 회수가 빠른 단기적 이익에 집중해 왔다.⁴⁴⁾ 하지만 극동지역은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충으로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경제협력은 다음 몇 가지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극동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진전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자본을 대고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이용한 경제협력단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미래 시장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시여겨 왔다. 초기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연해주 스베틀라야(Svetlaia) 지역에서의 현대목재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문제로 인해 강력한 지역과 국제적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무산되었다. 또한 잘 알려진 것으로는 나호트카의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⁴⁵⁾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 프로젝트 진전에 합의했으나 그 규모는

44) Peggy F. Meyer, "The Russian Far East's Economic Integration with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Pacific Affairs*, Vol. 72, No. 2(1999), p. 217.

330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토지개발 공사는 한국기업들에게 빌려줄 인프라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49년간 이곳을 임대했다. 러시아정부는 건설공사 소요기자재 반입시 관세와 조세를 면제하고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다.⁴⁶⁾ 하지만 나호트카와 연해주의 기간시설 부족으로 전력난, 용수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기간 시설 확충이 공단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한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이다. 2003년 11월 13일 타당성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개발과 건설에 한·러·중 3국이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진척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일본과 몽골과 더불어 5개국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 사업은 러시아의 재정위기로 지연되다가 2000년 한·중·러 3국간의 타당성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이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극동지역에서 이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은 사할린 석유·천연가스 프로젝트이다. 1~6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개발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송유관건설 등의 부문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업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주로 전자제품·식품·의류 등으로, 러시아 극동의 거주자들은 한국을 중국보다 질 좋은 물건

45) Elizabeth Wishnik, "The Regional Dynamic in Russia's Asia Policy in the 1990s," Judith Thorton and Charles E. Ziegler, *op. cit.*, p. 308. 나호트카 공단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왜냐하면 연해주 두마의 경제특구입법의 논쟁으로 테크노파크 계획이 한때 무산되었으며, 연해주 前주지사와 그의 주요 적수인 前행정관이고 연해주 두마의장인 세르게이 두드니크(Sergei Dudnik)와의 사이에 부패와 정치적 투쟁으로 보다 복잡해졌다. 그런데 경제특구입법이 1998년 12월 마침내 통과되었고, 1999년 5월 러시아와 한국정부는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것에 다시금 합의했다.

46) 한종만, 「한·러경제협력과 시베리아·극동러시아」, 한국슬라브학회 발표논문(2002. 11. 15-16), p. 123.

들의 수입처로 간주하고 있다.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이후에도 한국은 연해주와 사할린의 질 좋은 소비재 공급처가 되고 있다. 대략 1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 상인들이 블라디보스톡과 부산을 왕복하며, 소규모로 물건을 수출입해 왔다. 러시아의 재정위기는 한·러 교역을 40% 이상 축소시켰고, <표 1>에서 보듯이 극동지역에서의 무역도 1998년, 1999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2000년에 들어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재정위기 동안 일부 한국회사들은 위기 이전에 보낸 상품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는 계속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사무실을 유지하였고, 러시아 극동은 한국의 전자제품·

<표 1> 하바로프스크주와 연해주지역의 한·일과의 교역 1992-2000

(단위: 백만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하바로프스크주									
한국(수출)	5.3	28.1	52.3	44.4	31.2	32.1	24.1	10.9	14.0
(수입)	19.5	20.2	31.2	50.9	50.0	65.3	100.4	55.0	61.0
(합)	24.8	48.3	83.5	95.3	81.2	97.4	124.5	65.6	75.0
일본(수출)	48.9	43.2	37.6	37.4	26.2	37.8	17.8	42.0	35.8
(수입)	182.5	277.4	246.0	301.0	248.4	281.1	178.5	213.0	210.0
(합)	231.4	320.6	282.7	338.4	274.6	318.9	186.3	255.1	245.8
연 해 주									
한국(수출)	114.6	13.0	95.0	107.2	143.4	187.0	113.0	100.0	127.0
(수입)	21.7	34.2	49.0	62.1	163.4	179.3	105.0	134.0	151.0
(합)	136.3	47.2	144.0	169.3	306.8	366.3	218.0	234.0	278.0
일본(수출)	98.3	66.2	76.0	57.1	71.6	91.9	61.0	38.0	32.0
(수입)	110.3	122.3	189.0	206.4	228.0	318.7	264.0	161.0	194.0
(합)	208.6	188.5	265.0	263.5	299.6	410.6	325.0	199.0	226.0

출처: A.B. Ignatiev (et.al) Investitsionnyi Atlas, tom 1(Elizabeth Wishnick, *op. cit.*, p. 302, 재인용)

식품·건축부문에서 강력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연해주에서 한국의 對연해주 수출액이 일본에 비해 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극동지역에 제품생산공장의 건설이다. 대표적으로 의류제조업을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일부 의류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류수출 쿼터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연해주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파르티잔스크(Partizansk) 지역의 한국의류공장은 미국시장을 겨냥해 의류를 생산했다.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환영했으나, 일부는 값싼 노동력 이용이라는 면에서 비판했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극동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해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는 큰 기대를 보았지만 협력이 그리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지역은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으로 나누어 편중되어 있는데, 2000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총 건수는 110건이며, 투자총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한국 해외투자의 약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넷째, 통신분야의 협력도 전망이 밝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무선통신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하여, 'New Telephone Company'사의 대지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여 통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시 CDMA방식의 상용화 분야에서 협력증진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전망은 밝다.

이 외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분야는 다양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수산업, 농업, 삼림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역과의 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접근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유권과 점유권 등의 관리문제에서 논란이 크기⁴⁷⁾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47) Jenifer Duncun and Michelle Ruetschle, "Agrarian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ton and Charles E. Ziegler, *op. cit.*, pp. 193-222.

(2) 러·일 경제협력

러·일간 정치관계 진전이 어려웠던 만큼 경제관계 역시 순조롭지 못했다. 일본은 구소련시대에 오히려 '정경분리'원칙에 기초해 상당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구소련의 최초 장기신용공여국이었을 뿐 아니라 1973년에는 다나카 수상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소·일간 시베리아·극동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 이후 일본은 서방국가들과 더불어 대소경제체재를 실시했으며, 대소외교의 기본원칙을 '정경불가분'으로 전환하고 '북방 4개섬'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관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러·일 경제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체제 와해과정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력은 협력의 동인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교역관계에서 자명하게 드러났다. 1989년 러·일간 무역액은 60억 달러로 최고조를 달했던데 비해 이후에는 교역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 일·러간 수출입총액이 1990년대 내내 40~5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뿐 아니라 일본의 총무역액에서 대러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보다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에게 대러수출 비중은 1980년대 1.1~1.2%였는데 비해 1990년대에는 0.1~0.3%로 상당히 하락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에는 제3국을 통한 일본의 대러수출이 누락된 것이다.⁴⁸⁾ 3국을 통한 수출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수치보다는 클 것으로 예

48) Kunio Okada, "The Japanese Economic Presence in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and Chales E. Ziegler, *op. cit.*, pp. 423-425. 1994년에서 1996년까지 연간 2백만대의 일본 TV가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재정위기로 제3국을 통한 수출은 다소간 타격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상되지만, 이를 감안할지라도 양국간 무역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표 1>에서 보듯이 극동지역과의 교역도 예상외로 저조하다. 교역뿐 아니라 원조와 투자부문 역시 제한적이었다. 소련방 와해 이후 일본정부는 G-7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그 원조의 주요 대상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초 일본의 대러원조는 인적부문과 기술부문을 모두 포함해서 3억 8천 1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원조뿐 아니라 러·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러시아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 지속적인 영토갈등, 일본의 국내정치적 상황의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해졌고, 러시아 극동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극동지역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의 3대 기본원칙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일본을 극동지역에 대한 주요한 투자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기대해 왔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간에는 경제력과 발전수준 따른 산업구조의 차이, 즉 러시아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보유국이며 일본은 자본과 산업기술의 보유국이라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다.⁴⁹⁾ 극동지역 정부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인프라의 구축이며, 지리적 위치나 자본보유면에서 초기에 큰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이 사업은 러시아 중앙당국이나 다른 유럽국가가 아닌 일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행정관리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00년 8월 2일 기자회견에서 사할린의 주지사인 파르후디노프(Igor Farkhutdinov)는 일본과의 지역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국간 평화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중앙당국에 제기하였다.⁵⁰⁾ 극동의 지역정부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극동지

49) Yevgeny B. Kovrigin, "Problems of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op. cit.*, pp. 70-86.

역에 대한 일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중국이 2000년 대규모 군사물자 수입으로 하바로프스크 주에서 최고 수입국의 지위를 확보했으나,⁵¹⁾ 일반적으로 일본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이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비철금속과 귀금속, 목재, 수산물, 연료 등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 극동은 좋은 천연자원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지만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21세기 중반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중국도 에너지수요의 15~20%가 부족한 수입국이며, 일본과 한국의 석유소비를 감안할 때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러시아 극동에서 일본의 투자를 원하는 주요 부문은 인프라건설 부문으로 얼마간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일본은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유즈노 사할린의 공항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루비노 항구의 개선을 위한 투자 타당성조사에 3천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1999년 5월 연해주 행정부와 러·일 경영위원회는 일본이 자루비노의 곡물저장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자루비노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데 1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⁵²⁾ 또한 1997년 온실가스배출 축소에 관한 교토국제회의 이후 미즈이, 미즈비시, 스미모토 등의 일본 회사들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사할린주의 발전소 혁신에 투자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은 소비에트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90년대 초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은 사

50) *RIA Novosti*, August 2, 2000.

51) 2000년 하바로프스크의 대중수출은 5억 2천 400만 달러로 일본의 2억 1천만 달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52) Elizabeth Wihnick, *op. cit.*, p. 312.

할린 대륙붕의 석유와 가스프로젝트에 일찌감치 참여해 왔다. 일본의 컨소시엄인 SODECO는 사할린 프로젝트 I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미츠이와 미츠비시는 사할린 프로젝트 II의 공동개발회사이다. 최근 사할린 남단에 위치한 포르드고르니예에 액화기지를 건설하여 일본, 한국, 중국 등에 LNG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⁵³⁾ 사할린에서 일본으로의 해저전력망과 사할린-홋카이도 가스 파이프라인이 논의중이며, 일본은 앙가르스크에서 중국 다칭으로의 송유관라인을 나호트카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⁵⁴⁾

일본은 사할린에 많은 합작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왔다.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주에서는 목재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연해주의 쩌르노우드(Ternowood) 합작회사는 높은 품질의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바로프스크주의 다이리쿠(Tairiku)에서는 정교한 제조공법의 적용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극동지역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히 교역이나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러·일 경제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일본의 시장경제의 경험을 전달하는 문화센터의 설립, 병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핵잠수함 해체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등도 가동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과 러시아 극동간 경제협력 역시 발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으로는 영토문제의 미해결과 같은 정치적 문제도 있으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간의 교역이 단순히 극동지역 천연자원의 수출과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양국간 교류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구조의 현대화나 경제구조 개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⁵⁵⁾

53) 김경순, 「한러관계의 안보동학」, 『평화연구』, 제11권 4호(2003년 가을), pp. 163-164.

54) *Izvestiya*, 2003. 1. 13.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러시아의 핵잠수함 해체에 2억 달러, 플루토늄 재활용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5) Tsuneo Akaha, Pavel A. Minakir, Kunio Okada, "Economic Challenge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op. cit.*, pp. 49-69.

5. 결 론 : 지역협력의 전망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두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의 경제적·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일·미 등과의 경제협력이다. 잠재적으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발전에 있어 중국과의 긴밀화보다는 한·미·일과의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보다 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가능하며, 러시아 무기의 가장 중요한 판매처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일정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유럽측 러시아에 비해 중국인의 이민이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극동지역에 어떤 인구적인 위협도 되지 않으며 중국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태경제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주요 국가라고 본다. 극동지역은 정치적 차원의 대외관계보다는 석유와 가스, 목재, 통신 등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연방해체 초기의 정치적 접근에 비해 에너지·원자재, 통신, 어업 등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접근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 아직 극동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이 미비되어 있으나, 석유·가스개발, 에너지송유관 건설, 해양수송, 두만강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협력프로젝트, TSR-TKR 연계의 의한 동북아지역 공동의 교통망 형성, 환경문제 등과 같은 협력논의가 각 국가간 쌍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실질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러시아와의 지역협력에 있어

서의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련방 해체 이후 이념적 갈등이나 러시아 군사력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안보위협으로 작동하지 않을 지라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3국간 쌍무적·다자적 차원의 협력추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요인들이 상호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극동지역에서 한·러·일간의 지역적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1) 긍정적 요인

지역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각국 지도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협력조건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 지도자의 의지는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발전에 대한 명확한 구상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푸틴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필요성이라는 전제 외에, 개발을 위한 대외·안보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입장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옐친시대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대외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극동지역을 둘러싼 협력에 제동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⁵⁶⁾ 이에 비해 푸틴 대통령은 미·러간의 대결적인 입장을 최소화하면서, 대아시아로의 진출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극동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직시해 왔다. 2000년 7월 대통령 당선 직후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기 전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국가로서 외교정책에서의 균형을 이를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방문 이후 푸틴은 블라고베셴스크(우무르州的 州都)에서 극동지역의 지도자들과 만나 극동지역의 발전을 논의했다. 이때 하바로프스크의 주지사인 이사예프(Viktor

56) Herbert J. Ellison, "Russia, Korea, and Northeast Asia," Nicholas Eberstadt & Richard J. Ellings,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03), pp. 164-187.

Ishaev)는 극동지역의 에너지위기와 인구문제를 제기하고, 러시아 중앙정부와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철저한 수행을 제기했다.⁵⁷⁾ 푸틴도 극동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원칙에 따른 연방자산의 집중적 분배를 강조했다. 또한 이 회담 이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바이칼 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구상으로 '21세기 러시아의 아·태전략'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투자환경·우호적인 조세체계·인프라체계의 발전계획 등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극동·시베리아지역 발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의 의지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러, 러·일의 협력은 동북아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세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국제환경도 지역내 협력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⁵⁸⁾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력 못지않게 일본, 한국과의 협력이 동북아에서의 균형잡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에서 세력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급성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과도한 접근을 견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러·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셋째, 경제구조상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일본은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①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② 자원과 산업개발을 위한 노동력 증대; ③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⁵⁹⁾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중앙과 멀리 떨어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동북아국가들이다. 러시아의 국내투자나 유럽의 자본은 지리

57) Sergey Sevastyanov, *op. cit.*, p. 241.

58) Rajan Menon, *op. cit.*

59) Young-Chool Ha, *op. cit.*

적, 발전수준, 시장성이라는 점에서 극동지역보다는 유럽러시아와 서시베리아지역 투자를 우선한다. 동북아에서는 서방 투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과 한국을 들 수 있다. 투자뿐 아니라 앞서 지적한 노동력의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인적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지역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의 주민이 일본이나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못지않게,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2년 연해주 남부거주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좋아하는 국가였으며, 그들은 대부분 일본과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⁶⁰⁾ 연해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극동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경제활성화와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도자들 역시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급격히 삭감된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은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이라고 보고 있다.

(2) 부정적 요인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프로젝트와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사업은 기대만큼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첫째, 이들 국가간 부정적인 상호인식이다. 러시아의 일본인식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패배, 1918~22년 일본의 시베리아 간섭전쟁,⁶¹⁾ 냉전기

60) Tsuneo Akaha, "A Paradigm Shift in Russo-Japanese Relations," Tsuneo Akaha (ed.), *op. cit.*, p. 64.

61)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제11권 제4호(2003년 가을), pp. 254-255.

적대국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 또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일본의 남쿠릴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일본 역시 러시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1941년 소·일 중립조약을 위반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했으며, 제2차대전 이후 시베리아에서 일본인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냉전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 등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역으로 러시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지닌 한국은 일본에 대한 치욕과 혐오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일본 수상의 신사참배 등으로 불거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한·러간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약한 편이나 러시아는 기대했던 경제협력의 부진, 한반도문제에서의 소외 등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대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러시아로서는 해외투자 유치에 지극히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건이 미비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재정체계는 불완전하고 조세제도도 발달하지 못했으며, 법률지배체제도 미발달된 상태이다. 대외교역과 투자를 위한 법적·행정적 메커니즘도 부적절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부재와 운용메커니즘의 열악성이 마피아와 같은 세력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은 러시아의 외국투자에 대한 신뢰조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극동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보고인 시베리아·극동지역은 현재 전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품의 수송과 수출을 위한 도로·항만 설비의 노후화,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설도 극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극동지역은 즉각적인 협력이나 상품생산 협력보다는 인프라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대

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단위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넷째, 극동지역이 아직 경제활력을 보이지 못한 채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⁶²⁾ 극동지역의 무력함은 제반 인프라의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상품시장으로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극동지역의 인구는 7백만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그들의 생활수준도 러시아 전국 평균이하이다. 구매력이 극히 저조하며, 그러한 양상은 앞으로 나아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극동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시장성은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세종연구소, 1998.
- _____, 「러시아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전망」, 『군사』 제37호(1998).
- _____, 「한러관계의 안보동학」, 『평화연구』 제11권 4호(2003년 가을).
-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제11권 제4호(2003년 가을).
- 플로라야 G. 다비도비치, 김록양 역, 「러시아·북한관계 考察:러시아와 북한:極東의 오랜 파트너」, 『극동문제』, 2000년 No. 5(<http://www.nanet.go.kr/qhatsnew/foinfo/file/foinfo68-3.htm>)
- 한종만, 「한러경제협력과 시베리아·극동러시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2002. 11. 15-16
- 홍성원,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일·러 경제관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2002. 11. 15-16.
- Akaha, Tsuneo, Minakir, Pavel A., Okada, Kunio, "Economic Challenge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ed.), Akaha, Tsuneo(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 Far East: Changing Ties with*

62) Rajan Menon, *op. cit.*

- Asia-Pacific*,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 Akaha, Tsuneo, "A Paradigm Shift in Russo-Japanese Relations," Akaha, Tsuneo(ed.),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Akiyama, Masahiro,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RUSI Journal*, Vol. 143, No. 2(April, 1998)
- Arai, Nobuo and Hasegawa, Tsuyoshi, "The Russian Far East in Russo-Japanese Relations," Akaha, Tsuneo(ed.), op. cit(1997).
- Cha, Victor,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Duncun, Jenifer and Ruetschle Michelle, "Agrarian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ussian Far East," Thorton, Judith and Ziegler, Charles E.(ed.), *Russia's Far East: A Region at Risk*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 Ellison, Herbert J., "Russia, Korea, and Northeast Asia," Eberstadt, Nicholas & Ellings, Richard J.,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03.
- Ha, Young-Chool, "The Dynamics of Russia-South Kore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Far East," Judith Thornton, Charles E. Ziegler(ed.), op. cit.
- Hook, Glen D. (ed.),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London and New York: Routedledge, 2001.
- Kimura, Hiroshi, "Putin's Policy Toward Japan: Return of the Two Islands, or More?," *Demokratizatsiya*, Vol. 9, No. 2(Spring 2001)
- Kontorovich, Vladimir, "Can Russia Resettle the Far East?," *Post-Communist Economics*, Vol. 12, No. 3(September 2000)
- Kovrigin, Yevgeny B., "Problems of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 (ed.), op. cit(1997).
- Kremenuik, V., "The Ideological Legacy in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A Russian Journal)*, No.3, 2001(<http://www.cionet.org/olj/iarj/krv02.html>)

- Latin, Viktor L., "‘Yellow Peril’ Agai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Far East," Kotkin, Stephen and Wolff, David(eds.)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rmonk, NY: M.E. Sharpe, 1995.
- Mansourov, Alexandre Y., "Russia President Putin's Policy towards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Vol. 15, No. 1 (Spring/Summer 2001).
- Menon, Rajan, "The Sick Man of Asia: Russia's Endangered Far East," *The National Interest*, Vol. 73(Fall, 2003).
- Meyer, Peggy F., "The Russian Far East's Economic Integration with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Pacific Affairs*, Vol. 72, No. 2(1999).
- Okada, Kunio, "The Japanese Economic Presence in the Russian Far East," Thornton, Judith and Ziegler, Charles E.,(ed.), op. cit.
- Pavliatenko Victor and Shindov, Alexander, "Russia-Japanese Relations: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Far Eastern Affairs*, No. 4(2000).
- Popov, Vladimir, "Reform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ussian Far Ea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3, No. 4(Winter 2001).
- Sevastyanov, Sergey, "Russia Reform: Implications for Regional Policy and the Military," Judith Thornton and Charles E. Ziegler(ed.), op. cit.
- Shim, Jae Hoon & Ed. Paisley, "Trade and Trade-off: Yeltsin's Visiting Bring Profit to Seoul, Moscow,"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5, No. 48(Dec. 3, 1992).
- Shuja, Sharif M., "Moscow's Asia Policy," *Contemporary Review*, Vol. 272, No. 1587(April 1998).
- Titarenko, M.& Mikheev, V., "The Asia-Pacific Region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 (Russian Journal)*, No. 3(2001).
- Toloraia, Georgii, "Korean Peninsula and Russia," *International Affairs (Russian Journal)*, No. 1(Feb. 2003).

Valliant, Robert, "The Political Dimension," Akaha, Tsuneo(ed.), op. cit. (1997)

Wishnik, Elizabeth, "The Regional Dynamic in Russia's Asia Policy in the 1990s," Judith Thornton and Charles E. Ziegler(ed.), op. cit.

Zagorsky, Alexei V. "Three Years on a Path to Nowhere: The Hashimoto Initiative in Russian-Japan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74, No.1(Spring 20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http://www.nanet.go.kr/file4/foinform62-3.htm).

『世界週報』, 2000. 9. 11.

East Asia Strategic Review 2000,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2000.

Goskomstat Possii, *Rossiiskii statisticheskii ezhegodnik ofisial'noe izdanie 2000* Moskva, 2000.

Joint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Russia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on the Adoption of the Russia-Japanese of Action, the Kremlin, Moscow, January 10, 2003(http://www.In.mid.ru).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London: IISS, 1989.

Izvestiya, 1996. 1. 10.

Izvestiya, 2003. 1. 13

Nezavisimaya Gazheta, 1992. 8. 19

Nezavisimaya Gazheta, 2003. 1. 15,

RIA Novosti, 2000. 8. 2.

(원고투고일 : 2004. 7. 1,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동북아, 러시아 극동, 한·러 관계, 러·일 관계, 지역협력

<ABSTRAC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ed on Korea, Japan and Russian Far East in Transition -

Kim, Kyung-soon

As it has transferred from the closed system based on ideology to open system since post-cold war, the regiona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lot of potential for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Northeast Asia has mode basic conditions in terms of geographical proximity, security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economic structure. However,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have not faced up to expectations, even though Russia has transformed to market economy system.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sinc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describe how Korean-Russian and Japanese-Russian Relations in Russian Far East has been develop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s and examine the prospects of their relations.

Russian Far East in important for Northeast Asia in terms of its security and economic reciprocal interests. Although economic situation in Russian Far East has been complicated, it has the following merits: plentiful reserves of natural resources, the geographical location linking east-west, and the proximity to capital-rich Asia-Pacific countries. Moreover, Russia wants to establish itself as an Northeast Asian Power, but it is aware of its limited investment resources to RFE, and see neighboring countries as

sources of support for RFE's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re is an interest coincidence of three countries in developing the RFE, a complementarity between capital-scarce Russia and resource-poor Korea and Japan. On the contrar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Russia and the institutional and lawful defects become a factor which hampers and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Many factors including mutual perception among the countries and change of international situation have also affected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Korean-Russian, Russian-Japanese cooperation have great significance not only of itself but, within the context of processed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Key Words : Northeast Asia, Russian Far East, Korean-Russian Relations, Russian-Japanese Relations, Regional Cooperation

K C I